

“지난해 살림 잘했나” 결산안 심사

도의회 문건위, 의안심사 2건 원안가결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 등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운)는 4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갖고 2건의 의안 및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 교통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검토하여 광역차원의 각종 풍수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하고, 저감대책에 대한 실질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권'과 공간정보 중장기계획을 수립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전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해

당 풍수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각 주민대표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것과 하천상류에 댐이 건설됨에 따라 토사가 퇴적되는 등 하천 근처의 생태변화가 바뀌고 있어 장기적인 조사를 통한 저감대책 필요성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물 부족에 대한 피해 및 방황제시도 추후 종합계획 수립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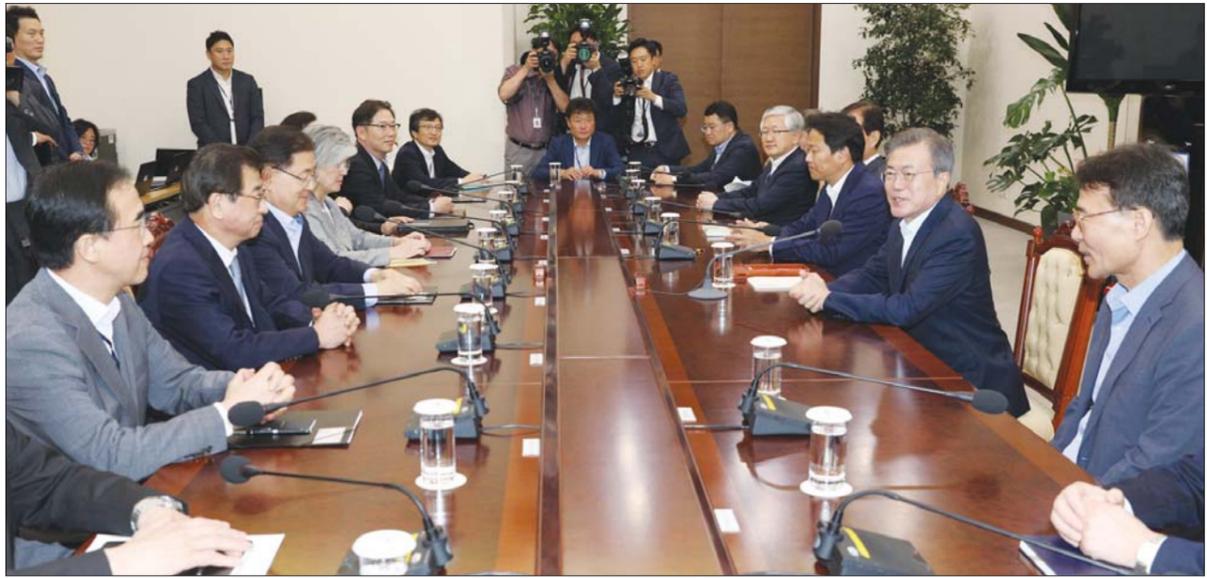
또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재해에 대한 계획인 만큼 체계적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이 바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등 사업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분석 및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입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체권 확보조치를 통해 미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외교안보 장관회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오신환 임명

채이배 비서실장·김삼화 수석대변인... 당 화합 최선

바른미래당은 4일 당 사무총장에 오신환, 비서실장에 채이배, 수석대변인에 김삼화 의원을 임명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을 배분해 당의 융합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처음부터 강조해온 것이 당의 화학적 결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지만 당사와 사무처가 두개로 나뉘어있었다"며 "전일 비대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두개였던 당사·사무처가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오신환 신임 사무총장에 대해 "비대위원이자 선거대책본부의 본부장을 하였고 정치적 역량으로 당을 하나로 화합하는데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 생각해 모셨다"고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당에 손 대표님 체제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사무처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

다. 선거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채이배 비서실장에 대해 "제가 당 대표로 당을 화합하면서 당내 내부적인 혁신과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거기에 채 의원의 역량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비서실장은 "지금까지가 바른미래당의 창당진행과정이라고 본다면 이제 당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 대표는 김삼화 수석 대변인에 대해 "당의 사무총장으로 일을 많이 했고 이번 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지만 기자들을 자주 만나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손 대표는 정책위의장 등 차후 인선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평화당 제1 정조위원장에 박지원 선임

원내대변인에 최경환 인선

민주평화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1 정책조정위원장(정조위원장)으로 박지원 의원을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은 최경환 최고위원이 맡는다.

최경환 신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5개 정조위원회를 4개로 바꾸고 각 정조위의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제1 정조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은 법제사법·외교통일·행정안전·국방을 맡는다.

제2 정조위원장은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맡으며 기획재정·정무·과학기술정보통신을 담당한다. 제3 정조위원장은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은 책임지며 김중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제4 정조위원장은 장정숙 의원으로 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교육·문화체육관광을 맡는다.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원주 의원에서 최경환 최고위원으로 변경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늘 인선을 하면서 최고위원, 전·현직, 당선 의원 등 당 사정을 감안해서 솔선수범해서 작은 당직이라도 앞서 맡아서 새로운 기풍을 만들자고 의견의치를 썼다"고 전했다. 그는 "박지원 의원께서도 제1정조위원장을 맡는 파격적인 인선이 있었고 흔쾌히 승락하셨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일 세비 동결 후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는 문화상 국회의장 제안과 관련해 "여야 각 정당은 즉각 검토에 들어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비례성 확대는 결국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필요로 한다"며 "현역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하는 결단을 기대하기

‘은행 대출 금리조작’ 제도적 허점 메꾼다

김중희, 은행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 명시

은행 이용자가 대출을 받을 때 부당한 금리를 적용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위반 시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고 은행이 대출시 이자율 상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중희 의원(조선, 전북 김제·

부안·사진)은 "부당금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조작 은행에 대한 제재조항과 소비자정보제공의무를 명시한 은행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조작해 대출이자 30억원을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부과했음을 확인했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있어, 은행이 고의로 대출금리를 조작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개정안은 은행이 내규 등을 위반하여 가산 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을 시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52조의2제1항제3호)했다.

또한, 신규대출 또는 대출기간 연장 시 신용도 상승이 되었음에도 은행이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시 우대금리 정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조항도 신설(52조의5)했다.

김 의원은 "은행이 고의로 금융소

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다"며 "또 다른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금리 조작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금융 소비자 신용도가 상승했음에도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불합리한 사례도 예방하기 위해 대출시 고객에게 이자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이정미 "세비동결 의원 확대 제안 관련 여야 답해야" 촉구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일 세비 동결 후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는 문화상 국회의장 제안과 관련해 "여야 각 정당은 즉각 검토에 들어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비례성 확대는 결국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필요로 한다"며 "현역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하는 결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원을 늘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비용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고려해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면 이는 분명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방향에 동의한다면 입장 차이는 충분히 좁혀나갈 수 있다"며 "쉽지 않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논의의 물꼬를 즉각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